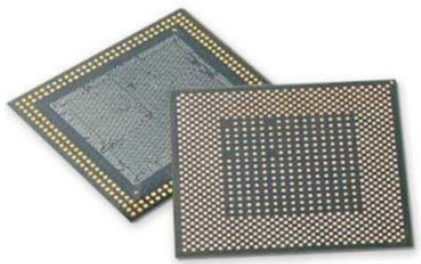


AI 수요확산에 기판 ‘쇼티지’ 조짐... 가동률·가격 동반 상승

삼성전기, 전년비 생산시설 5%↑
기존 생산라인 효율화... 단기 개선
일부 FC-BGA 제품군 가격 인상

LG이노텍, 생산시설 5.2% 늘어
중장기적 생산능력 2배 확대 목표



삼성전기 고성능 반도체 기판 ‘플립 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 삼성전기

인공지능(AI) 수요 확산으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시장에 ‘쇼티지(공급부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상승하며 사실상 풀가동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플립칩 볼그리드어레이(FC-BGA)를 중심으로 제품 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시설은 각각 70%, 8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고성능 반도체 기판인 AI 서버·데이터센터용 FC-BGA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최근 일부 FC-BGA 제품군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서버 확산으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생산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협상력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성능 CPU·GPU를 사용할수록 보다 정밀한 기판이 요구되지만 FC-BGA는 제조 난도가 높은 제품으로 단기간 내 생산 확대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양사는 최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설비 확충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서버·데이터센터용 FC-BGA 수요가 생산능력보다 50% 이상 많다”며 “보완 투자도 하고 일부 공장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지난 23일 주주총회에서 “서버에 들어가는 FC-BGA 등 반도체 기판은 내년 하반기에 풀가동이 예상된다”며 “생산능력을 현재보다 2배 정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양사의 대응 전략에는 차이도 엿보인다. 삼성전기는 기존 생산라인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며 단기 시적 개선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AI 기업들의 수요를 적기에 대응해 시장 공백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이노텍은 단기적인 물량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인 생산능력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생산능력을 현재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끌어올려 2028년 본격 양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솔루션 형태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며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스마트폰과 PC용 제품 비중이 높지만 향후 서버용 기판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2027년부터 적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수요 확대에 기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품사 중심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단기적 현상을 넘어 일정 기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USTR, ‘韓 플랫폼 규제’ 무역장벽 지목

(미국 무역대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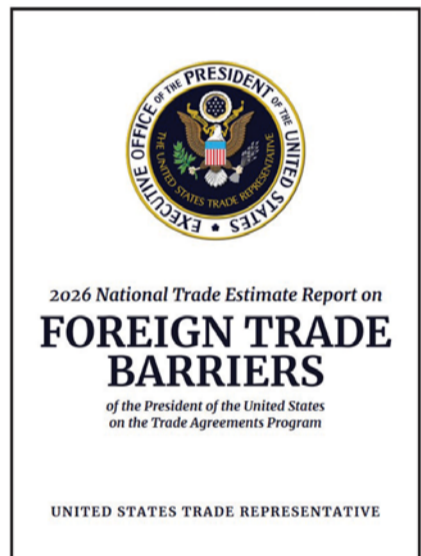
관세회피 방지협력 협정 부재 지적
노동법 집행 관련해서도 우려 표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공정 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 같은 방안은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한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전 규제와 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2026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했다. /NTE 표지 캡처

무 조항을 부과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업계와 소통을 개선할 것”을 지

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USTR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포함된 내용이다. ‘경쟁 정책’이었던 소제목이 올해는 ‘반독점 관행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회피 방지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이어 “협정 부재는 한미간 합법적 무역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국을 경유해 환적되는 제3국 제조업체의 고위험 화물을 양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한국의 노동법 집행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 근절 등에 대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롯데물산, 롯데칠성음료 양평동 부지 인수

10년 만에 부동산 개발사업 재시동
약 6400평 규모 2805억에 매입

롯데물산이 서울 양평동 부지를 사들이며 약 10년 만에 본격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다시 시동을 건다.

잠실 랜드마크 개발 이후 간접 투자와 자산관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온 롯데물산이 직접 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롯데물산은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칠성음료 부지(양평동5가 119번지 외 17필지 일원)를 2805억원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한다고 공시했다. 롯데물산이 매입한 부지는 2만 1217㎡(약 6400평) 규모로 롯데칠성음료가 1965년 매입 후 물류센터, 차량정비 기지로 사용해왔다.

입지 경쟁력은 뛰어나다.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인 데다 올림픽대로와 맞닿아 있어서 서울 전역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여의도 업무지구와 가깝고, 인근에 선유도공원과 한강공원, 안양천 산책로가 형성돼



롯데물산이 매입한 롯데칠성음료 양평동5가 119 일원 항공 사진(빨간색). /롯데물산

있어 주거 선호도도 높은 편이다. 목동 생활권과도 인접해 학원, 병원, 상업 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개발 여지는 충분하다. 해당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20년 선유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200%가 적용되는 만큼, 통상 공동주택 중심의 개발이 이뤄지는 구역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metro

KDDX, 사업비·영업비밀 논란에 다시 ‘흔들’

(한국형 차기 구축함)

방사청, 가처분 여파 속 설명회 진행

약 2년간 표류했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재개 국면에서도 다시 흔들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설명회를 예정대로 열며 절차를 이어갔지만, 사업비 갈등과 영업비밀 논란이 겹치며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달 31일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설명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제안요청서(RFP)내용을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의 가처분 신청 여파로 민감한 공방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제안서 작성 방식 등 실무 질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기본설계 자료

공유 문제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배부한 자료에 최신 공법과 신기술, 제품 사양, 가격 등 입찰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자료 공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본설계 195개 항목 가운데 12개 항목은 경쟁사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방사청은 자료 제공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본설계 결과물의 소유권은 계약에 따라 방사청에 있고, 특정 업체의 비밀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방사청은 가처분 소송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비를 둘러싼 문제도 충분한 검토 없이 9000억원 선에서 일단락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설계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2024년 선도함 사업비는 8820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이후 물가와 환율, 인건비가 오른 점을 감안하면 현재 9000억원 선의 사업비에는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관련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방사청이 지난 2년간 사업 지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속도보다 과정 관리에 더 무게를 뒀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와 충분한 조율 없이 절차를 밀어붙이면서 영업비밀 논란과 사업비 문제를 동시에 키웠다는 것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사전 소통 없이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한 것은 방사청의 미숙한 대응을 보여준다”며 “물가와 환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업체 요구를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탈법 편법적 행위·용도의 유용 여부 점검

>> 1면 ‘은행 가계대출...’서 계속

해당 조치는 전 금융권의 준비기간 및 차주의 대출 상환 계획 수립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온투업 LTV규제로 ‘풍선효과’ 차단**
이밖에도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 편법적 대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사업자 대출의 용도의 유용 127건, 가계대출 약정위반 2982건이 적법해 대출회수 등 조치를 시행했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의 유용 여부도 금융회사, 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적인 대출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사업자대출 용도의 유용 행위 적발시 제한되는 신규대출 범위를 금융회

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로 넓힌다.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도 차단한다.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업계자율규제(주담대 대출한도 6억원)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및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전(全)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의 만기연장 제한, 대출 규제 위반 행위 점검등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